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
----------	-----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책정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정원 책정 및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960명 → 965명(증 5)

- 집행기관의 정원 : 943명 → 948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변동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일반직〉 729명 → 735명(+ 6명)

- 6 급 : 180명 → 186명 (본청 +4, 의회 +1, 직속기관 +1)
- 7 급 : 221명 → 218명 (본청 Δ2, 직속기관 Δ1)
- 8 급 : 174명 → 175명 (본청 +2, 의회 Δ1)
- 9 급 : 102명 → 104명 (본청 +1, 읍면동 +1)

〈기능직〉 168명 → 167명(Δ1명)

- 6 급 : 5명 (본청 +1, 사업소 Δ1)
- 7 급 : 15명 (본청 Δ1, 사업소 +1)
- 9 급 : 50명 → 51명 (사업소 +1)
- 10급 : 74명 → 72명 (본청 Δ1, 사업소 +1, 읍면동 Δ2)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와 같이 함(안 별표)

3. 자치법규안 : 불임

4. 신규 대비표 : 불임

5. 소요예산 : 123,000천원

6. 참 고 자 료 : 불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 행정자치부령 제253호(2004. 9. 24일 공포 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통보
- 경북도 자치행정과-3787(2005. 4. 26)
-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
- 도시개발과-11982(2005. 3. 3)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2조중 “960”을 “965”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943”을 “94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대비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960</u> 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43</u> 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u>965</u> 1. 집행기관의 정원 : <u>948</u> 명 2. (현행과 같음)

〈별지〉

[별표]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합 계			965	429	17	163	104	25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735	348	11	97	45	234
	4 급		5	3	1	1		
	5 급		47	17	2	5	4	19
	6 급		186	99	4	20	13	50
	7 급		218	106	3	17	14	78
	8 급		175	96	1	36	8	34
	9 급		104	27		18	6	53
별 정 직	소 계		19	3		14	2	
	6급상당		13			13		
	7급상당		6	3		1	2	
연 구 직	소 계		5	1		2	2	
	연구관							
	연구사		5	1		2	2	
지 도 직	소 계		38			38		
	지도관		3			3		
	지도사		35			35		
기 능 직	소 계		167	76	6	12	55	18
	6 급		5	2			3	
	7 급		15	7			8	
	8 급		24	10			14	
	9 급		51	33	5	3	8	2
	10 급		72	24	1	9	22	16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내역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정원 증원 : 5명 (일반직 5)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인 원	1인당 연간 총액인건비	산 출 내 역 (월 소요액×12월×인원)	비고
계	123,000	5			
7 급	27,816	1	27,816	$2,318 \times 12 \text{월} \times 1 \text{인} = 27,816$	
8 급	49,848	2	24,924	$2,077 \times 12 \text{월} \times 2 \text{인} = 49,848$	
9 급	45,336	2	22,668	$1,889 \times 12 \text{월} \times 2 \text{인} = 45,336$	

※ 인건비 판단 기준

- 기본급, 수당(기말, 정근, 가족, 초과근무)
- 복 리 후 생 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 이 전 경 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2005. 10. 17(월)

시의회 총무위원회 설명자료

「일반직 6급 정원확대 책정,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공무원 정원책정 및 조정계획

영 주 시

「일반직 6급 정원확대 책정,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공무원 정원관련 자치법규 개정계획

☐ 추진방침

- 6급 공무원 정원책정비율 확대(추가정원 책정) : '04년 17명, '05년 6명
- 신규업무 전담인력 보강 지침시달에 따른 정원증원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부서별 직급·직렬조정

☐ 주요내용

〈조례개정〉 -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 공무원 정원 증원 : 5명 (총 960명 → 965명)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신설 : 증원 4명(사회복지직 : 7급 1, 8급 2, 9급 1)
 - 도시관리지역 확대(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포함) : 증원 1명(도시계획9급 1)
- 6급 정원책정 확대 : 6명(총 180명 → 186명)
 - 행정6급 3, 기계·전기6급 1, 행정+전산·통신6급 1, 행정+화공+환경6급 1
 - ※ 6급 정원책정 인원만큼 7급이하 감축

〈규칙개정〉 -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 부서별 직급·직렬조정

☐ 관련근거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통보
 - 경북도 자치행정과-3787(2005. 4. 26)
-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 (도시개발과-11982(2005. 3. 3))

☐ 향후계획

- 정원 관련 조례·규칙 개정(안) 수립 : 2005. 10. 11
- 정원 관련 자치법규 입법예고 : 2005. 10. 19
-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회승인 : 2005. 11월 임시회 시(예정)

6급 정원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정원 책정(안)

○ 정원책정 : 6명(6급 +6, 7급 △4, 8급 △2)

⇒ 행정 3, 기계+전기 1, 행정+전산+통신 1, 행정+화공+환경 1

○ 부서별 정원책정(안)

부서명	당초(무보직)		1차 6급정원책정		금회 6급정원 책정		직급별 정원 조정	비고
	직렬	인원	직렬	인원	직렬	인원		
계		9명		17명		6명		
기획감사담당관실			행 정	1				
정보통신담당관실			행 정	1	행정·전산·통신	1	· 행정급△1, 전산급△1, 통신급△1 · (행정+전산+통신7급) +2	
종합민원처리과	행 정	1						
총무과	행 정	2	행 정	1				
주민자치사무과			행 정	1				
세무과	세 무	1	세 무	1				
회계과			행 정	1	기계+전기	1	· 기계8급 △1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1				
문화관광과			행 정	2 (도시관)				
경제교통과			행 정	1				
경영개발과			행 정	1				
환경보호과	행 정	1			행정·화공·환경	1	· (행정+환경7급)△1 · (환경+화공7급)△1 · (행정+화공+환경7급)+1	
산림축산과	임 업	1	행 정	1 (휴양관)				
건설과	토 목	1						
재난안전관리과					행 정	1	· 행정7급 △1	
도시개발과			토목·도시계획	1				
주택지적과			건축·지적	1				
의회사무국					행 정	1	· 행정8급 △1	
농업기술센터	농 업	1	농 업	1	행 정	1	· 행정7급 △1	
보건소	약 무	1	간호·의료기술	1				
			보 건	1				
수도사업소							· 전기8급 △1 · (기계+전기8급) +1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개정 에 따
른 조직관리지침 시달

1.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174(2004.9.24)호의 이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군구 6,7급 공무원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 개정·공포('04.9.24)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조직관리
세부지침을 시달하오니,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1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지방행정주시 여세무 지방행정사무관 이인남 자치행정과장 10/01 문경봉

협조자 지방행정주서보 이종득 지방전산주서보 함진대 지방행정주시 자문호

시행 자치행정과-7608 (2004.10.01.) 접수 총무과-6860 (2004.10.01.)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 /전송 (053)950- / seawoo@gb.go.kr / 공개

2004. 9. 24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가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행 정 자 치 부

◀ 목 차 ▶

1. 시행규칙의 개정배경과 요지

2. 개정령의 주요내용 및 조직관리지침

☐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

☐ 규정개정에 따른 정원책정한도

☐ 정원책정원칙

☐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따른 인사관리

3. 행정사항

※ 첨부자료

1. 도농복합시 현황

2.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책정현황

3.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채정비율 확대 등
가구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1. 시행규칙의 개정배경과 요지

□ 개정배경

- 시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을 강화
-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시군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 개정요지

◇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 시군구의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채정비율을 1% 확대
- 7급 공무원의 정원채정비율을 1% 축소

◇ 지방자치단체 유형간 형평성 확보

-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6급 정원 채정비율을 일반시 보다 높게 책정
- 6급은 3% 확대, 7급은 3% 축소

2. 개정령의 주요내용 및 조직관리지침

□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개정내용 : 규칙 별표 5 ▶

- ◇ 시군구의 일반직 6급 채정기준 확대 조정
 - 일반직 6급 비율을 확대하고 7급은 축소
- ◇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일반시보다 높게 채정
- ◇ 개정규정에 의하여 6급 정원을 추가로 채정하는 경우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군구의 핵심 실무인력인 6급 공무원의 정원채정비율을 1% 확대하고, 7급 공무원의 정원채정비율을 1% 축소
-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사적체가 특히 심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6급은 3% 확대하고, 7급은 3% 축소
 -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군통합시)만 해당
 - ※ 해당 도농복합형태의 시 : 불임 1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내용 >

◆ 시·군·구

(단위 :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종전기준	1	7	23	33	24	12
	개정기준	1	7	24	32	24	12
군	종전기준	1	6	26	32	24	11
	개정기준	1	6	27	31	24	11
자치구	종전기준	1	7	18	30	31	13
	개정기준	1	7	19	29	31	13

◆ 도농복합시(시·군 통합시에 한함)

(단위 : %)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종전기준	1	7	23	33	24	12
	개정기준	1	7	28	30	24	12

□ 규정개정에 따른 정원책정 한도(부칙 제2항) : 연간 15명 이내

○ 일시에 많은 인원의 6급 승진으로 무보직 담당급을 양산하지 않도록 정원책정

- 금회 규칙 개정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추가 책정되는 6급 정원이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년에 1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책정

▷ 15명은 금회 개정으로 6급비율이 확대됨으로써 추가 책정되는 6급 정원만을 의미

▷ 규칙개정 이전의 6급 책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는 경우 이는 「1년에 15명의 범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정원책정비율 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6급 정원의 결원에 따른 통상적인 승진 소요인원은 별도로 승진조치 가능

예시 1) 6급책정 정원이 개정전에 기준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고, 금회 개정으로 총 35명을 추가책정할 수 있는 경우

▷ 시행일을 기준으로 1차년도에 15명까지, 2차년도에 15명까지, 3차년도에 5명 책정 가능

예시 2) 6급정원을 개정전에 기준보다 10명 적게 운영하고 있고,
금회 개정으로 추가로 총 20명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

- ▶ 1차년도에 총 25명(10명+15명)까지 추가책정 가능,
다음 2차년도에 5명까지 추가 책정 가능

예시 3) 6급정원을 개정전에 기준보다 30명을 초과 책정하고 있었고,
금회 개정후 기준과 종전기준에 의한 차이가 30명 이하일 경우

- ▶ 금회 개정에 따른 추가책정 가능 정원은 없음

예시 4) 6급정원을 개정전에 기준보다 20명을 초과 책정하고
있었고, 금회 개정후 기준과 종전 기준에 의한 차이가
40명일 경우

- ▶ 잔여 추가책정 가능 정원은 20명(40명-20명) 뿐이고,
1차년도에 15명까지, 2차년도에 5명까지 책정 가능

□ 정원책정원칙

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 중간
관리계층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 지방분권, 혁신, 자체평가, 재난관리 등 기능이 확대되거나
새로 창출되는 분야의 담당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 ◇ “시·군·구의 경우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

- ◇ 금회 규칙개정으로 6급 정원책정가능인원이 일시에 대폭
증가하여 4인 이상의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금회에 한하여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체인력을 조정하는 경우 2~3명의 정원으로도 「담당」
설치 가능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총괄·기획·주무부서에 종합기획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무보직 배치 가능

-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담당」 설치를 위한 6급 정원의 추가 요구를 지양하고 최대한 무보직 6급 정원을 조정하여 설치

※ 향후 무보직 6급 정원이 있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6급 정원 요구시 불승인 방침

③ 정원채정기준 조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민업무 등 현장 실무인력이 필요한 읍면동에는 배치 금지

-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99. 5. 3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01. 6. 29) 준수

□ 정원채정기준 조정에 따른 인사관리

- 이번 규칙개정의 취지는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장기재직 7급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승진임용시 장기재직자를 우대
 - 승진임용 인원의 50%이상은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의 장기 재직자를 우선적으로 임용
- 장기재직자 중 격무부서 장기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하되 수행직무의 양, 책임도, 난이도 및 기여도를 고려

3. 행정사항

- 시행일 : 이 규칙을 공포한 날('04. 9. 24)부터 시행
- 일반직 6급 정원채정 현황 제출(서식 별첨)
 - 1차 제출일 : '05. 9. 24(대상기간, '04. 9. 24 ~ '05. 9. 23)
 - 2차 제출일 : '06. 9. 24(대상기간, '05. 9. 24 ~ '06. 9. 23)

붙임 1

도농복합시(시군통합) 현황

시·군·구	시·군·구	설치이전 구역	설치일자
경기	평택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95. 5. 10
	남양주시	미금시, 남양주군	'95. 1. 1
강원	춘천시	춘천시, 춘천군	'95. 1. 1
	원주시	원주시, 원주군	"
	강릉시	강릉시, 명주군	"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
충북	충주시	충주시, 충원군	'95. 1. 1
	제천시	제천시, 제천군	"
충남	천안시	천안시, 천안군	'95. 5. 10
	공주시	공주시, 공주군	'95. 1. 1
	보령시	대천시, 보령군	"
	아산시	온양시, 아산군	"
	서산시	서산시, 서산군	"
전북	군산시	군산시, 옥구군	'95. 1. 1
	익산시	이리시, 익산군	'95. 5. 10
	정읍시	정주시, 정읍군	'95. 1. 1
	남원시	남원시, 남원군	"
	김제시	김제시, 김제군	"
전남	순천시	순천시, 송주군	'95. 1. 1
	여수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98. 4. 1
	나주시	나주시, 나주군	'95. 1. 1
	광양시	동광양시, 광양군	"
	포항시	포항시, 영일군	'95. 1. 1
경북	경주시	경주시, 경주군	"
	김천시	김천시, 금릉군	"
	안동시	안동시, 안동군	"
	구미시	구미시, 선산군	"
	영주시	영주시, 영풍군	"
	영천시	영천시, 영천군	"
	상주시	상주시, 상주군	"
	문경시	점촌시, 문경군	"
	경산시	경산시, 경산군	"
	창원시	창원시, 창원군 일부	'95. 1. 1
경남	마산시	마산시, 창원군 일부	"
	진주시	진주시, 진양군	"
	통영시	총무시, 통영군	"
	사천시	삼천포시, 사천군	'95. 5. 10
	김해시	김해시, 김해군	"
	밀양시	밀양시, 밀양군	'95. 1. 1
	거제시	장승포시, 거제군	"

붙임 2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채정 현황

<○○시도>

구분	규칙개정전 정원현황 (‘04. 9. 23 현재)		규칙개정후 정원현황 (‘05. 9. 23 현재)		D-A
	채정기준 (A)	채정정원 (B)	채정기준 (C)	채정정원 (D)	
계	명	명	명	명	명
○○시					
○○군					
○○구					
⋮					
예시 1	230명	225명	260명	250명	20명
예시 2	230명	240명	260명	245명	15명

<작성요령>

- A : 종전 정원채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정원
- B : '04. 9. 23 현재 정원
- C : 금회 개정된 정원채정기준에 의해 산출한 정원
- D : '05. 9. 23 현재 채정한 정원

※ 시·군·구만 해당(시·도에서 취합 제출)

붙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 253 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군·자치구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4% 이내	12% 이상
군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4% 이내	11% 이상
자치구	1% 이내	7% 이내	19% 이내	29% 이내	31% 이내	13% 이상

비고

1.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운영에 관한 특례)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6급 정원을 추가로 책정하는 경우 그 추가 책정분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간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경상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통
보

1.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321(2005.4.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2005.2.22, 국무회의)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
달체계개선팀-151(2005.3.21)호와 관련입니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관련 인
력보강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정 정원
을 초과한 시군에서는 2005.4.27(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고 6급 당당에 대해서는 무보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 1 부

2. 지방자치단체별 인력보강 내역 1 부

3. 보정정원초과 지자체 정원승인신청서 1 부, 끝.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시장,군수

발령일자 2005.04.26

이세우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근

자치행정과장

04/26
박남거

협조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장춘

지방전산주사보

황진태

지방행정주사

차문호

시행 자치행정과-3787 (2005.04.26.) 접수 총무과-3118 (2005.04.27.)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445-3

/ http://www.gb.go.kr

전화 (053)950-3326 /전송 (053)950-2548 / seawoo@gb.go.kr / 공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

'05. 4월



행 정 자 치 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

I. 추진배경

-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 수차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보고('05. 2.22)를 통해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을 증원키로 결정하였음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

II. 그간의 추진경과

- 2004. 12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초안)을 마련
- 2005. 1. 18, 관계부처 국장회의(4개기관)
- 2005. 1. 21, 관계부처 1급공무원 회의(4개기관)
- 2005. 2. 22, 1,830명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증원과 복지기능의 조정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확정

◀ 사회복지직공무원 배치현황 : 7,200명 ▶

- '87~'94년, 2,380개 읍면동에 별정직 3,000명 배치
 - '99.10월, 별정직 2,837명의 일반직(사회복지직) 전환
 - '99.10월, 1,200명 증원(사회복지직 9급)
 - '00. 3월, 600명 증원(사회복지직 9급)
 - '01. 5월, 700명 증원(사회복지직 9급)
 - '02. 1월, 1,700명 증원(6급 17, 7급 433, 8급 101, 9급 1,149)
-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04.12.31) : 9,231명

II.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계획

1. 기본방향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시 관계부처가 협의한 보강인력 1,830명에 대해 지자체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수혜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적정 배분
- 보강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본청 또는 읍면동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되
 - 시군구의 사회복지 기획·조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1담당 운영 소요인력은 본청에 배치
- 보강인력의 직렬은 수행기능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직」으로 함

2. 세부내용

□ 기 구

○ 시군구 본청에 가칭 “복지기획담당” 신설

○ 수행기능

-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등

※ 상세내역 : 불임1 참조

□ 정 원 : 총 1,830명

○ 보장인력은 시군구별 6명을 기본으로 함

※ 산정기준 : 복지기획업무 3명, 서비스 연계업무 1명,
긴급지원업무 1명, 자활업무 1명

○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를 감안하여
1~4명 추가보강

- 복지대상자 200명~300명미만 86개 시군구 : 1명
- 복지대상자 300명~400명미만인 99개 시군구 : 2명
- 복지대상자 400명~500명미만인 26개 시군구 : 3명
- 복지대상자 500명이상인 5개 시군구 : 4명

○ 일반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행정기능이 구별로 수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구별 2명씩 추가보강

- 일반구 : 총 22개(경기 16, 충북·전북·경북 각 2개)

※ 지방자치단체별 인력보강내역 : 불임2 참조

▶ 정원 책정방법

-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정원의 보정정원초과 등으로 자체책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원 승인 신청을 받아 일괄 승인조치할 예정
- ※ 보정정원초과 지자체 정원승인 신청서 : 붙임3 참조
- 담당설치시 사회복지직 무보직이 있는 경우 무보직을 반드시 활용
 - 무보직활용 지자체는 6급 대신 8급 1명 신청 가능

□ 직급 책정

- 금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에 의거 「복지기획담당」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라미드형 조직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6급 1명을 제외한 7급이하 실무인력에 대한 적절한 분포비율 유지

※ 6급 234명, 7급 275명, 8급 706명, 9급 615명

Ⅲ. 사회복지업무 기능조정

1. 기본방향

- 읍면동에서 수행중인 업무 중 시군구 본청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업무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 시군구 본청은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간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일선업무를 수행하고
- 읍면동은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과 담당자의 현장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급품 전달, 가전방문 등)를 수행토록 개편

2. 기능조정안(예시)

관련부처	이관대상 업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요청 등 사후관리 ○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련 사후관리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 경로당 실태파악 및 개·보수사업 추진 ○ 묘지 매(개)장 신고 및 현장확인 처리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접수 및 교부 ○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 변동 및 급여조정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장애인 보장구 신청접수 및 사후관리 ○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입소의뢰 ○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등 관리
청소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선도활동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 본 기능조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이관대상을 확정·통보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시행

IV. 행정사항

□ 보정정원초과 시군 정원신청 : 2005. 4. 27(수)까지

- 현정원의 보정정원초과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없는 지자체는 붙임서식에 의거 정원승인 신청
-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자체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보강여부 결정 및 보강조치

□ 정원조례·규칙 개정

- '05. 5월말까지 정원조례·규칙 개정 마무리

□ 신규임용

- 시도에서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신규임용절차 이행
- 이번 신규 임용시험은 연초부터 계획된 시험이 아님을 감안, 응시희망자가 응시기회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실시

□ 특별임용 등(자체 실정을 감안, 적절히 판단하여 시행)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전직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별정직공무원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임용령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인사규칙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 희망자는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

※ 별정직공무원이 특별임용되어 결원이 발생한 종전의 별정직 정원은 감축하거나,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 종전 사회복지전문요원, 여성복지상담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사회복지직) 공무원 전환시에 직급이 종전의 상당계급보다 하향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우선 승진임용

참 고 사 항

- ① 복지기획담당 수행기능(예시)
- ② 지방자치단체별 인력보강내역
- ③ 보정정원 초과 지자체 정원승인 신청서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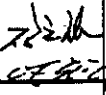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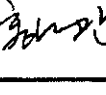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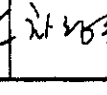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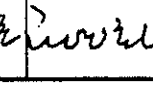



『복지기획담당』 수행기능(예시)

-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
-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
- 보건복지행정 전산망의 관리
-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총괄
-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 서비스 실시·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 자활사업관리업무
-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 지역특수사업개발·시행계획 수립
- 서비스실시·연계 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제100회 - 총무 제2차)

구 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대상자	공무원1인당 복지대상자	보 장 내 역					비고
					계	6급	7급	8급	9급	
전 남	무안군	45	15,502	344	8	1	1	3	3	
	함평군	43	10,150	236	7	1	1	3	2	
	영광군	48	15,590	325	8	1	1	3	3	
	장성군	48	26,270	547	10	1	2	4	3	
	원도군	53	13,754	260	7	1	1	3	2	
	진도군	31	10,636	343	8	1	1	3	3	
	신안군	38	13,314	350	8	1	1	3	3	
경북 소계		1,071	362,582	339	180	23	27	70	60	
경 북	포항시	149	43,515	292	11	1	2	4	4	
	경주시	65	25,299	389	8	1	1	3	3	
	김천시	66	18,257	277	7	1	1	3	2	
	안동시	63	25,732	408	9	1	2	3	3	
	구미시	95	59,505	626	10	1	2	4	3	
	영주시	55	16,439	299	7	1	1	3	2	
	영천시	60	15,962	266	7	1	1	3	2	
	상주시	37	16,056	434	9	1	2	3	3	
	문경시	45	14,104	313	8	1	1	3	3	
	경산시	60	23,333	389	8	1	1	3	3	
	군위군	24	4,970	207	7	1	1	3	2	
	의성군	31	10,466	338	8	1	1	3	3	
	청송군	22	6,876	313	8	1	1	3	3	
	영양군	24	6,157	257	7	1	1	3	2	
	영덕군	30	10,760	359	8	1	1	3	3	
	청도군	30	7,868	262	7	1	1	3	2	
	고령군	18	5,721	318	8	1	1	3	3	
	성주군	30	6,517	217	7	1	1	3	2	
	칠곡군	36	10,831	301	8	1	1	3	3	
	예천군	38	10,261	270	7	1	1	3	2	
	봉화군	33	8,751	265	7	1	1	3	2	
	울진군	43	13,752	320	8	1	1	3	3	
	울릉군	17	1,450	85	6	1	1	2	2	
경남 소계		977	290,535	297	147	20	21	60	46	
경 남	창원시	66	22,667	343	8	1	1	3	3	
	마산시	102	32,232	316	8	1	1	3	3	
	진주시	112	30,015	268	7	1	1	3	2	
	진해시	45	10,698	238	7	1	1	3	2	
	통영시	43	12,515	291	7	1	1	3	2	
	사천시	57	15,359	269	7	1	1	3	2	
	김해시	73	32,620	447	9	1	2	3	3	
	밀양시	65	16,961	261	7	1	1	3	2	

문서번호	58400- ⁵⁸⁴⁰⁰⁻¹⁰
보존기간	10
보고일자	2005. 3. 3

도시계획 담	도시개발 담	산업건설 국	부시 장	시 장
				
협조	인사담당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

【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

- 도시관리지역이 당초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되었고, 비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시설계획·토지적성평가 등 신규 제도 도입으로 업무량 증가
- 도시관리계획 업무가 계획 및 개발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에 따른 공간적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업무가 생성되어 사전 전문인력 추가확보 필요
(※건교부에서 영주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도시정보화사업 추진 중에 있음)

□ 현황

- 현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도면 유지관리와 도시민원, 기타 도시 관련 지원업무를 도시계획직 1명이 전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지적민원담당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가 도시계획사항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발급 및 질의응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도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음

□ 문제점

- 토지의 난개발 등 국토이용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문화된 인력부족으로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토이용정보구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공간적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미확보 시 대민 서비스 차질이 예상됨
- 도시계획 도면 관리 및 유지의 전문성 부족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오류에 따른 책임문제 수시 발생

□ 추가인력 확보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과 관련한 인력 확보 요청 (건교부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과-도시58214-10843호, 2002.6.22)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데이터 구축 및 유지관리와 민원 담당 인력 필요 (건설교통부-도시정책과-7373호, 2004.12.30)

□ 전문인력(도시계획직) 추가 소요 인원

구분	업 무 내 용	인력 확보계획 (명)			비고
		당초	증감	변경	
계		2	2	4	
기존	도시기본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촉진 지구사업,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등	1	1	2	도시 계획
	GIS 및 LMIS	1		1	지리 정보
신규	제2중지구단위계획, 토지작성평가, 국토이용정보구축 및 유지관리		1	1	도시 계획

참 고 사 항

□ 경상북도내 도시계획직 인력확보 현황

시·군 소속	경상북도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영주시	기 타
도시과 도시계획분야	1	3	3	3	2	2	기타 시·군 각 1-2명

□ 도시관리계획 업무 증가 내용

○ 도시계획 구역·용도지역 관리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 적(km ²)	49,550	666.75	619.395	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기능조정안(예시)

관련부처	이관대상 업무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수급자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 중지요청 등 사후관리 ○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련 사후관리 ○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 경로당 실태파악 및 개·보수사업 추진 ○ 묘지 매(개)장 신고 및 현장확인 처리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접수 및 교부 ○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실태조사 및 의뢰 ○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 변동 및 급여조정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장애인 보장구 신청접수 및 사후관리 ○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자 입소의뢰 ○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신청자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등 관리
청소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선도활동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

※ 본 기능조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이관대상을 확정·통보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시행

IV. 행정사항

□ 보정정원초과 시군 정원신청 : 2005. 4. 27(수)까지

- 현정원의 보정정원초과 등으로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없는 지자체는 불임서식에 의거 정원승인 신청
-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자체는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보강여부 결정 및 보강조치

□ 정원조례·규칙 개정

- '05. 5월말까지 정원조례·규칙 개정 마무리

□ 신규임용

- 시도에서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신규임용절차 이행
- 이번 신규 임용시험은 연초부터 계획된 시험이 아님을 감안, 응시희망자가 응시기회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실시

□ 특별임용 등(자체 실정을 감안, 적절히 판단하여 시행)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전직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별정직공무원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임용령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인사규칙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 희망자는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

※ 별정직공무원이 특별임용되어 결원이 발생한 종전의 별정직 정원은 감축하거나,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 종전 사회복지전문요원, 여성복지상담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사회복지직) 공무원 전환시에 직급이 종전의 상당계급보다 하향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우선 승진임용

참 고 사 항

- ① 복지기획담당 수행기능(예시)
- ② 지방자치단체별 인력보강내역
- ③ 보정정원 초과 지자체 정원승인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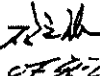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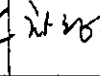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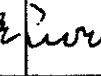



<붙임 1>

『복지기획담당』 수행기능(예시)

-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
-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
- 보건복지행정 전산망의 관리
- 사회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총괄
- 지역사회복지 자원 및 서비스 현황관리
-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 서비스 실시·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 자활사업관리업무
-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 지역특수사업개발·시행계획 수립
- 서비스실시·연계 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구 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복지대상자	공무원1인당 복지대상자	보 강 내 역					비고
					계	6급	7급	8급	9급	
전남	무안군	45	15,502	344	8	1	1	3	3	
	함평군	43	10,150	236	7	1	1	3	2	
	영광군	48	15,590	325	8	1	1	3	3	
	장성군	48	26,270	547	10	1	2	4	3	
	완도군	53	13,754	260	7	1	1	3	2	
	진도군	31	10,636	343	8	1	1	3	3	
	신안군	38	13,314	350	8	1	1	3	3	
경북 소계		1,071	362,582	339	180	23	27	70	60	
경북	포항시	149	43,515	292	11	1	2	4	4	
	경주시	65	25,299	389	8	1	1	3	3	
	김천시	66	18,257	277	7	1	1	3	2	
	안동시	63	25,732	408	9	1	2	3	3	
	구미시	95	59,505	626	10	1	2	4	3	
	영주시	55	16,439	299	7	1	1	3	2	
	영천시	60	15,962	266	7	1	1	3	2	
	상주시	37	16,056	434	9	1	2	3	3	
	문경시	45	14,104	313	8	1	1	3	3	
	경산시	60	23,333	389	8	1	1	3	3	
	군위군	24	4,970	207	7	1	1	3	2	
	의성군	31	10,466	338	8	1	1	3	3	
	침습군	22	6,876	313	8	1	1	3	3	
	영양군	24	6,157	257	7	1	1	3	2	
	영덕군	30	10,760	359	8	1	1	3	3	
	청도군	30	7,868	262	7	1	1	3	2	
	고령군	18	5,721	318	8	1	1	3	3	
	성주군	30	6,517	217	7	1	1	3	2	
	칠곡군	36	10,831	301	8	1	1	3	3	
	예천군	38	10,261	270	7	1	1	3	2	
	봉화군	33	8,751	265	7	1	1	3	2	
	울진군	43	13,752	320	8	1	1	3	3	
	울릉군	17	1,450	85	6	1	1	2	2	
경남 소계		977	290,535	297	147	20	21	60	46	
경남	창원시	66	22,667	343	8	1	1	3	3	
	마산시	102	32,232	316	8	1	1	3	3	
	진주시	112	30,015	268	7	1	1	3	2	
	진해시	45	10,698	238	7	1	1	3	2	
	통영시	43	12,515	291	7	1	1	3	2	
	사천시	57	15,359	269	7	1	1	3	2	
	김해시	73	32,620	447	9	1	2	3	3	
밀양시		65	16,961	261	7	1	1	3	2	

문서번호	58400- ⁴² 171
보존기간	10
보고일자	2005. 3. 3

도시계획 담당	도시개발 과장	산업건설 국장	부시 장	시 장
				
협조	인사담당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
【국토계획법 개정 관련】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계획 변화에 따른 인력진단 보고

- 도시관리지역이 당초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되었고, 비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시설계획·토지적성평가 등 신규 제도 도입으로 업무량 증가
- 도시관리계획 업무가 계획 및 개발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에 따른 공간적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업무가 생성되어 사전 전문인력 추가확보 필요
(※건교부에서 영주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도시정보화사업 추진 중에 있음)

□ 현황

- 현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도면 유지관리와 도시민원, 기타 도시 관련 지원업무를 도시계획직 1명이 전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지적민원담당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가 도시계획사항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어 발급 및 질의응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도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음

□ 문제점

- 토지의 난개발 등 국토이용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문화된 인력부족으로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국토이용정보구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공간적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미확보 시 대민 서비스 차질이 예상됨
- 도시계획 도면 관리 및 유지의 전문성 부족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오류에 따른 책임문제 수시 발생

□ 추가인력 확보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 시행과 관련한 인력확보 요청 (건교부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과-도시58214-10843호, 2002.6.22)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데이터 구축 및 유지관리와 민원담당 인력 필요 (건설교통부-도시정책과-7373호, 2004.12.30)

□ 전문인력(도시계획직) 추가 소요 인원

구분	업 무 내 용	인력 확보계획 (명)			비고
		당초	증감	변경	
계		2	2	4	
기존	도시기본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촉진 지구사업,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등	1	1	2	도시 계획
	GIS 및 LMIS	1		1	지리 정보
신규	제2종지구단위계획, 토지확장평가, 국토이용정보구축 및 유지관리		1	1	도시 계획

참 고 사 항

□ 경상북도내 도시계획직 인력확보 현황

시·군 소속	경상북도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안동시	영주시	기 타
도시과 도시계획분야	1	3	3	3	2	2	기타 시·군 각 1-2명

□ 도시관리계획 업무 증가 내용

○ 도시계획 구역·용도지역 관리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 적 (km ²)	49,550	668.75	619.395	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용도지구 관리

구 분	개 소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26	323	297	
개발진흥지구	6	14	8	제2종지구단위계획
최고고도지구	2	3	1	
자연취락지구	9	258	249	도시지역 : 14 비도시지역 : 235
역사문화미관지구	1	2	1	문화재보호구역 (무섬마을 일원)
문화자원보존지구	8	54	46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시설 관리

구 분	개 소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843	902	59	
도 로	626	638	12	중앙고속도로 국도5,28,36 지방도 915, 931, 935
공 원	43	45	2	생태공원, 묘지공원
학 교	34	47	13	초등학교(분교) 12개교 중학교 1개교
녹 지	89	99	10	완충녹지 11개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
하 천	4	14	10	하천정비기본계획
기 타	47	59	12	고추시장외 11개소

○ 토지적성평가

필 지 수	관리대상면적(km ²)	비 고
110,000	227.8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 기타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증가 등

“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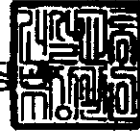
제목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시범지자체 선정알림 및 협조요청

1. 우리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을 위한 시범 모델링 사업참여를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동 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경상북도 영주시를 시범지자체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선정된 시범지자체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관련 전담직원 임명(우리부로 통보요망)
- 나. 귀 지자체의 도시계획관련자료 제공 등 업무협조
- 다.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용역회사의 협력파트너로서 역할 수행
- 라. 시범구축을 위한 작업공간 협조
- 마. 용역사업 수행중에 취득한 대외비 철저 준수. 끝.

건설교통부장



수신처 화성시장(도시계획과장), 영주시장(도시개발과장)

대기근 정복영 과장 전결 12/30
장근영

별첨:

시행 도시정책과-7373 (2004.12.30.) 전수 도시개발과-11305 (2004.12.30.)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용암동 1번지) / <http://www.moct.go.kr>

전화 02-2115-8167 전승 02-503-9181 / piqo1@moct.go.kr / 공개

관인생략

위대한 경북 함께 뛰는 300만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 (053)950 - 2181 / FAX (053)950 - 3419
도시계획과	과장 박기진 사무관 김홍선 담당자 김정수

문서번호 도시58214-10843

시행일자 2002.06.22 (3년)

공개여부 공개

(경유)

발용시장

참조

제 목

선	시	지	
상	장	시	
발	일자	2002.06.22	
시	시간	오전 09:26	
번호	11273		
처	리	과	
도	시	교	
통	과		
당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시행 대비 중점준비사항 통보

1. 건설교통부 도시58400-578(2002.6.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 추진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02.2.4 공포되었으며, 금년중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여 '03.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법이 시행되면 도시지역뿐만아니라 비도시지역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대상으로 편입되고 개발행위허가제의 적용대상 및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이 확대되며 기반시설연동제·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토지적성평가 등이 새로이 도입시행됨으로써 국토의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가 대폭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의 업무난이도가 높아짐은 물론 행정업무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도의 조기정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5. 따라서, 아직 시행령등 하위규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군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정리하여 통보하오니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내년 국토계획법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조례제정, 조직정비, 예산확보 등이 금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6. 아울러, 금년 하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확정되는대로 준비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개편내용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 준비사항

'02. 6.

건 설 교 통 부

□ 조직정비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행되는 상황에서 운영 부서가 복수인 경우 업무효율성과 다빈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 통합이 바람직
- 개발행위허가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등 업무의 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조직보강
 -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공무원의 인력보강
 - 인력보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추진(법 §116)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시·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및 부담금 사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검토(법 §73)

□ 국토계획법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 국토계획법과 유관된 법률이 70여개에 이르러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자치단체 모든 공무원이 동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 동법률은 일반국민에 대한 경제활동과 재산권행사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제도개편 이해부족으로 피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민홍보 실시
- ※ 건설교통부에서도 하위규정이 확정되는대로 지방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